



미래 지향적 산업보건이 되려면



김 현 욱 교수
가톨릭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

2005년 새해 벽두부터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얇은뱅이 병’ 사건은 산업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매우 충격이었다. 이는 반도체 제품 부품공장에서 노말 핵산을 이용한 세척 작업에 투입된 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다발성 신경장애로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 걷지도 못하는 전형적인 직업병이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특수건강진단도 받지 못하고, 사업주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도록 하면서 외출이나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사태가 발생하자 비행기표를 주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국 사업주와 공장장이 구속되고 사업장에는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이 직·간접으로 입은 손해는 이들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얻은 이익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제언에서는 불법 체류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점은 너무 당연하므로 논외로 하고,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산업보

건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한다. 이 사건이 현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서 걸러지지 않고, 민간차원의 NGO 활동에 의해 그리고 한 개인의 적극적인 구제 활동 차원에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음

과, 언제 어디서건 다른 형태의 유해물질에 의한 유사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보건 분야가 법의 보호막 아래 피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문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제도권 내에 있던 근로자만이 대상이었고, 여기서 소외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었다. 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치는 노출 기준 초과가능으로 나왔으나, 모의실험을 통하여 예측한 바로는 노출 상황은 훨씬 그 수치를 넘었다. 즉 일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던 주간 작업에 대해 내국인 정규직에 한해 측정할 결과와 실제 작업상황을 감안한 모의실험 결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결과치를 판단하여야 한다. 측정 결과가 기준 초과

가능이라면, 기본적으로 유해인자의 독성과, 노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자기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에 대한 대책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제도권 밖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알 권리는 확보되어야 마땅하다. 최소한 특수 건강진단이라도 받게 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이 작업에 대한 유해성을 주지시키고, 측정 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적극 권했다면 이런 비극적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더 나가서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전반에 대한 행정적 관리적 대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고령 사회로는 19년, 다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은 7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사회가 될 것이며, 2020년이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나이가 50세가 넘게 된다고 한다. 이에 겹쳐 출산

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2002년 한 부부당 출생률은 1.3으로 일본 1.33, 프랑스 1.89, 영국 1.64, 스웨덴 1.54, 노르웨이 1.85 등 어느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 젊은 인력이 산업체로 유입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근로자가 더욱 고령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저명한 경제학자이며 미래 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the next society'(미래 사회)에서 제조업은 앞으로 산업사회에서 농업이 경쟁력을 잃은 것과 같이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경제관련 연구소들은 제조업 전망을 그리 밝게 보고 있지 않다.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인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의 제조업은 후발국들의 치열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산업보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앞으로 주력 산업의 형태가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만 남게 될 것이다. 고용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는 피할 수 없고, 노동 인력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제 언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이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 작업과 같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지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이 늘며,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신종 유해물질에 저농도로 노출되는 경우는 더 증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산업보건 분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부의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년 - 2009년)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복지 사회의 달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 조성'과 '건강한 노동력 유지 증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60-70년대의 산업개발 시대에 사용되던 산업보건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된 대책들이어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보건 접근방식을 새롭게 변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즉 현재의 산업보건 체계인 일반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 방식으로는 저농도 노출에 의한 만성적 변화나 육체적 피로,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며, 현행 작업환경측정 관련 기준 및 제도로 일년에 한두 번의 측정으로는 다양한 유해인자와 저농도 노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화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향에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유전자나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근로자 건강문제 진단, 고령화 근로자들의 건강 유지, 관리, 증진 프로그램, 저농도의 유해인자에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새로운 측정기술 개발, 비정상적 근무를 포함한 모든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 것이며, 말 그대로의 국제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곧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소모성 인력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방치하다가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될뿐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도 심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산업보건 분야가 나갈 방향을 잡아야 할 때이다. ☺